

국민과 함께 뽑은 '26년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 총 37개 사례 출품, 국민투표·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순위 결정
- 「해외여행자 불법반입 예방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정보 로밍문자 안내」 최우수상 선정... 국민 체감 적극행정 성과 확산

관세청은 8월 28일(금) 서울세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7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내부 전문가 심사와 함께 국민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병행했다.

최종 심사는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했다. 위원회는 현장 발표 과제별 질의응답과 심층 토론을 거쳐 국민 체감도, 적극성, 창의성을 중점 평가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을 최종 선정했다.

* (위원장) 관세청 차장 (위원) 민간 전문가 6명, 내부 공무원 2명

최종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에는 △해외여행자 불법반입 예방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정보 로밍문자 안내가 선정되었고,
- 우수상 3건에는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유통차단 및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출국취소 재입국 여행자 불편 해소를 위한 면세범위 적용절차 마련, △면세점 환불 편의 제고를 위한 미징수 세금 부과취소 절차 마련이 선정되었다.

- 장려상 5건에는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신속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용 보세공장 제도 개선, △밀수출 도난차량 피해자 재산권 회복을 위한 국내 환수·재수입면세 지원, △회생가능 체납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지원,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한 원유 추가 하선 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 △K-푸드 중소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현장의 요구에 발맞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9건(요약)

별첨.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종 평가 사진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병진 (042-481-7670)
		담당자	서기관	강경아 (042-481-7715)



붙임 1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9건

구분		우수사례 내용
최우수상 (1)	제목	「출국과 동시에 시작되는 관세행정! 로밍문자로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다」
	현황	■ 국가별 상이한 규제로 인해 여행자가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 지속 발생
	적극행정	■ 외교부 운영 '해외안전 로밍문자발송' 플랫폼을 관세행정에 접목하여 별도 비용 발생 없이 직접적이고 신속한 안내 서비스를 추진 ■ 일본·미국행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태국의 대마식품, 일본의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반입 제한 안내 서비스 확대
우수상 (3)	제목	위조 공기청정기 필터 유통조직 검거, 압수를 넘어 소비자까지 지킨 적극행정
	현황	■ 대형 오픈마켓은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중개 플랫폼인 점을 악용하여 위조 필터를 정품으로 둔갑하여 유통하는 민생침해 범죄 급증 ■ 불법적인 수입물품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 세관에서 리콜을 명령하거나 개별 소비자에게 통보할 법적 권한 및 수단 부재
	적극행정	■ 압수물품(필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법정 의무가 없음에도 유해성 검사를 단행하여, 폐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분(CMIT·MIT) 검출 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온라인 오픈마켓 4개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리콜 등 행정명령, 판매중단, 소비자 개별 통보, 정부합동 언론보도 등 사후조치 적극 수행
	제목	출국취소 재입국(역사열) 절차 완벽 해결로 국민 불편 최소화하다
	현황	■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물품은 외국 반출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역사열 발생시 모든 여행자 면세품을 회수해야 함(관세법 제196조) ■ 유관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부재, 또한 플랫폼을 운영할 때 개인정보 노출 등 우려
	적극행정	■ 비상상황대비 민관합동 디지털 플랫폼 실시간 개설·운영 ■ 출국취소 재입국 여행자에게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미화 800불 이하) 적용을 위한 장기간의 노력 끝에 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인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3항 개정·시행('26.2.)
	제목	면세점 환불 쉬워진다
	현황	■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환불받더라도 세관에서 발급한 세금고지서는 취소 불가능 ■ 세금을 납부한 후 되돌려받기 위해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나 증빙서류 구비 및 절차가 복잡하여 국민들은 불편 호소
	적극행정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환불시 납부기한 종료 전이고,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고지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제공 ■ '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상정하여 채택('26.4월 시행)

구분		우수사례 내용
장 려 상 (5)	제목	세금 없는 신속 첨단산업 R&D 지원으로 대체불가 'K-초격차 기술 선점'
	현황	■ 보세공장에서 외국 원재료를 연구·개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통관과 세금납부 절차를 거쳐야 해서 많은 시간 지연 - 연구용 외국물품 수입통관 연간 2만 8천건, 최대 야간 9시간, 공휴일·연휴 5~6일 소요 ⇒ 연구용 물품 투입 지연으로 초격차 기술 경쟁에서 도태
	적극 행정	■ 연구·개발 장소에 보세공장 특허 허용으로 세금없이 신속한 연구·개발이 가능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시행('26.4.)) ■ 첨단산업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 신설('26.6.) 및 전국 거점 세관(8개) '원스톱 지원팀'을 이끌어 내며 전담 지원 체계 구축
	제목	중국으로 밀수출된 도난 차량 4대, 국내 환수 후 재수입면세 적용으로 잃어버린 국민재산을 찾아준다
	현황	■ 중국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도난 차량 4대에 대해 피해 차주가 국내 환수를 요청 ■ 일반 수입통관 시 피해자가 관·부가세를 부담할 우려
	적극 행정	■ 중국 포워딩 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도난차량 4대의 국내 반송 추진 및 반송 후 압수영장 집행과 검찰 환부 지휘를 신속히 확보 ■ 원상태 수출 후 재수입 증빙자료 제출 등을 통해 관세법상 재수입면세 적용
	제목	2,100억원 수출계약, 체납기업의 재도약을 견인하다
	현황	■ 일시적 경영악화, 수출계약 등 회생가능성이 있는 체납업체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체납처분을 할 경우 기업회생과 체납액 징수를 함께 달성하기 어려움 ■ 담보제공 체납업체는 체납 즉시 담보 처분, 압류·통관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져 경영악화와 체납장기화로 이어질 우려
	적극 행정	■ 업체별 수출계약·투자유치·자금유입 시기를 반영한 탄력적 체납처분과 신속 통관 등 기업지원으로 기업은 살리고 체납액은 회수하는 맞춤형 상생모델 구축 ■ 담보제공 업체가 체납 즉시 담보처분에 따른 폐업·경영악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압류·매각 유예제도를 활용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제목	사전컨설팅 감사 활용으로 10년 묵은 원유 하선비용의 악순환을 끊다
	현황	■ 기상악화로 하선을 중단한 뒤 추가 하선할 경우 적하목록 추가 제출이 필요하고 과태료·행정제재 우려가 있어 기업이 불필요한 운항비 부담 * 최근 3년간 공해 출항·재입항 관련 비용 62.3억원, 연평균 약 20.7억원 발생 ■ 과태료 면제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건별 판단해야 해 일선 세관이 단독으로 명확한 처리기준을 정하기 어려움
	적극 행정	■ 석유화학업계 현장애로를 직접 수집하고 업체간담회 5회, 현장점검 1회, 자체협의 5회로 사실관계·비용구조 검증 ■ 감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와 고의·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처리절차 명확화

구분	우수사례 내용	
	제목	K-푸드 중소 수출기업, 성장통에 3단계(STEP) 처방으로 수출 날개를 달다!
	현황	■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중동 정세에 따른 물류비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부담이 증가 ■ 특히 수출 초보기업은 해외 판로개척, 시장정보 부족, 품목분류·FTA 등 수출 실무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의 수출 단계에 맞춘 선제적·맞춤형 지원 필요
	적극 행정	■ K-푸드 수출 포럼 등을 통해 수출 애로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KOTRA·aT·식품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약 80개 기업 대상 「K-푸드 수출 전략 웹세미나」 개최(4.21.) ■ 품목분류·FTA 활용·원산지 관리·신 시장 분석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업 의견을 반영한 「K-푸드 수출 전략 가이드북」 제작·배포로 후속 지원